

10만의 요구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이제 국회가 응답하라!

9월22일, 10만 시민·노동자의 힘으로 국민동의청원이 완료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90일 안에 논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21대 국회는 응답하라!



반복되는 산재사망·재난참사, 솜방망이 처벌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월호 참사	강남역 스크린도어 산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산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산재	수원 공장 신축 건설현장 추락 산재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참사
304명 사망	1명 사망	1명 사망	22명 실종	1명 사망	1명 사망	38명 사망
청해진해운 벌금 1천만원	서울메트로 무죄	서울메트로 사장 벌금 1천만원	법인 벌금 1천5백만원	10월22일 첫 재판	원청 벌금 7백만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p>법 적용대상 확대 시민,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중대재해에도 적용</p>	<p>처벌대상 확대 기업,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책임공무원도 대상</p>	<p>처벌강화 하한형,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정지등 도입</p>	<p>인과관계 추정 반복된 범위반, 사고은폐 기업은 입증책임 전환</p>
---	--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엽서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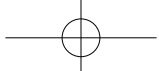
시민·노동자 10만의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문턱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이번 단계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엽서를 보내주세요!

온라인 엽서 보내기 | <http://bit.ly/국회기답해라>
직접 엽서를 보내고 싶다면? | 수량, 받을 곳, 이름 및 연락처를 적어 메일주세요!
nomoredeathact2020@gmail.com



QR코드 참여

NO MORE DEATH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2020년도 하반기

산재사망·시민재난참사 예방 탐구영역

성명	나국회	수험번호	2	0	2	0	-	8	2	8	2
----	-----	------	---	---	---	---	---	---	---	---	---

※ 문제지 상단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시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른 점에 유의하세요.

1. 우리나라는 하루에 약 몇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까요? [10점]

- ① 1명 ② 3명 ③ 5명 ④ 7명 ⑤ 9명

2. 2008년 이천에서 (주)코리아2000의 신축 냉동물류창고 화재로 일하던 57명의 노동자 중 40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코리아2000이 낸 벌금은 얼마일까요? [30점]

- ① 200만 원 ② 2,000만 원
 ③ 2억 원 ④ 20억 원
 ⑤ 200억 원

3.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은 학생, 선생님, 시민 등 304명이 사망한 재난참사였습니다. 당시 사고수습 과정은 총체적 부실이었는데, 구조실패와 관련해 책임을 진 공무원은 몇 명이었을까요? [20점]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4.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제정, 기업의 과실로 발생한 산재사망에 기업 법인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2011년 노동자 1명 사망에 이 법으로 기업에 매겨진 벌금은 얼마일까요? [10점]

- ① 54만 원 ② 154만 원
 ③ 1,540만 원 ④ 1억5,400만 원
 ⑤ 15억4,000만 원

5. 반복되는 산재사망, 재난참사를 근절하기 위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한 법안으로써 국민동의청원(8.26~9.22.)을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0점]

- ① 근로기준법 ② 중대재해기업처벌법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조법
 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풀이] 하루에 7명, 매해 약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대한민국. 이 통계에는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 어선원노동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 실제 산재사망 노동자는 훨씬 많다.

2. 정답: ②

[풀이] 40명 산재사망에 (주)코리아2000이 낸 벌금은 2천만원으로 노동자 1명의 죽음에 고작 벌금 50만 원이 내려짐.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노동자 산재사망 벌금을 내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대표 사례이다.

3. 정답: ①

[풀이]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 책임과 관련해 처벌받은 공무원은 단 1명(123정장)이었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책임자였던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2014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인천 시장에 당선되었고 해수부 장관, 목포해경서장 등 관련 책임자 중

제대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없었다.

4. 정답: ⑤

[풀이] 영국은 재난참사에서 기업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일반기업, 정부부처, 경찰, 군대 등이 유발한 노동자, 시민재해이며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형사책임을 묻는다. 벌금의 상한선도 없다.

5. 정답: ②

[풀이] 19대,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동의청원 10만 달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 법은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에게 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하고 기업의 안전정책·투자·인력 및 조직문화 등 구조적 원인에 의한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법으로 하한형이 없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하한형(3년이상 유기징역)을 도입했다.